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임미원*

〈국문초록〉

칸트의 실천철학은 선의지의 개념으로부터 무제약적인 당위명령과 의무개념을 도출시키는 의무론적 윤리학으로서 무엇보다 정언명령의 정식을 통해 표현된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중세적 신의 권위와 인간의 주관적-경험적 제약성 모두로부터 벗어난 실천이성의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다. 이 정언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과 재구성의 시도들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칸트주의자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이다. 그는 무제약적-보편적인 정언명령이 주는 규범적 부담을 덜어 내기 위해,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합리적 의지를 지닌 인간이 자아구성 및 행위자성에 기초하여 어떻게 도덕 원리에 대한 복종 대신 자기 이유로 인한 규범적 행위선택에 이르는지 설명해 주었고, 정신에 관한 구성주의적 모델을 통해 자아구성 내지 정체성 구조가 어떻게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지 보여 주었다.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행위의 이

DOI: 10.22286/kjlp.2017.20.1.004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투고일자 2017년 2월 28일, 심사일자 2017년 4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4월 11일.

유인식에서 무한소급에 빠지게 되고 자기인증적 설명에만 의존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자아구성 및 그와 연관된 행위의 구성적 원리에 대한 그의 호소는 도덕성을 합리성에 기초지우려는 시도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규범성은 정체성과 함께 간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I. 들어가는 말

의무론적 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이론과의 간단한 비교를 통해 의무론적 윤리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무론적 윤리와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는 이론으로는 행위선택에 있어 옳음(right)보다 좋음(good)을 우선시하는 목적론적 윤리이론이 있다. 행복, 즐거움 등 좋은 어떤 것(좋음)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을 실현할 행위를 선택하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목적이나 결과처럼 행위 선택의 앞과 뒤에 자리잡은 요소들보다 독립된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한다. 즉, 행위 자체의 속성이나 유형의 관점에서 행위 주체가 행위 선택에서 어떤 격률이나 원리를 취했는가, 자의, 주관, 감정, 우연 등의 요소가 배제되었는가 등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 근본주의나 엄격주의로도 묘사되며 일상적 정서로써는 공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린 듯이 보이는 의무론적 윤리의 핵심논거-근거는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할 때 그 한 전형으로 떠오르는 것이 칸트의 윤리학이다. 수 세대를 거쳐 다양한 반론과 재구성의 시도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여전하면서도 수정-변형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및 그에 대한 재해석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언명령으로 대표되는 칸트의 윤리학이 갖는 본질과 한계를 짚어 보고, 그에 이어 칸트 윤리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신칸트적 프로젝트’를 추구했던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현대에 추구되는 칸트로의 회귀가 어떤 방향-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II.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1. 선의지(gut will)

칸트에 따르면 이 지상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하고자 하는 의지뿐이다.¹⁾ 이해력, 판단력 같은 정신적 재능이나 용감함, 단호함 같은 기질적 속성 중 좋거나 바람직한 것들이 물론 있으나 이 자연적 소질들을 이용하는 의지(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력, 부, 명예 같은 행복의 연관요소들조차(선)의지가(정서에 작용하고) 행동의 전체 원리를 바로잡아 보편적-합목적적이게 만들지 않는다면 오만을 낳을 뿐이다. 이렇듯 인간이 가진 여러 속성이나 의욕의 대상들에 대해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선한(좋은)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지의 요소는 결정적인 준거점이 되며, 선하다고 여겨질 만한 많은 대상들을 전적으로 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한다. 그런 점에서(선)의지는 대상(속성이나 행위 등)의 도덕적 선함에 대한 선결-전제조건 또는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도덕적 선함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칸트의 견해, 즉 인간의 도덕성은 현세에서의 행복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복해질 만함(행복해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 줄 뿐이며, 다만 내세에서의 행복은 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선)의지는 인간이 행복해질 만한(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내세의 행복을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조건과도 같다.²⁾

이때 의지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은 이성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은 의지를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이끄는 데에 충분하진 않지만,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능력으로서 주어져 있으며, 이성의 최고

1)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Weischedel, W.(Hg.) Suhrkamp Taschenbüchern Wissenschaft in zwölf Bänden VII(1982),(이하 *GMS*), p.18. 칸트는 의지가 가진 본래의 속성을 성격, 특성(character)이라고 부른다.

2) *GMS*, p.18.

의 사명은 어떤 다른 의도에 대한 수단으로서 좋은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전적으로 선한 의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관적-감정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오직 이성만이 의지에 작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경험 세계 내의 다양한 제약과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신이 의욕하는 대로 의지결정함으로써 결코 무 제약적 선으로서의 선의지를 유지-실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선의지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주관적-경험적으로 제약되는 의욕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개념적 매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당위 및 의무 개념이다.³⁾ 경험적으로 제약된 인간이 선의지에 이르는 길은 경험 세계 내에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의욕한 바를 고수하고 실현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의욕을 규정-제한하는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당위 및 의무 개념 하에서 그 요청에 따르는 것뿐이다. 당위 및 의무 개념은 주관적-경험적 제약조건 하에서 인간이 도덕성의 차원을 인식하고 실현시키는 방식을 보여 준다. 주관적-경험적으로 제약된 존재인 인간은 당위로서의 도덕법칙이 제시하는 의무의 준수를 통해서만 도덕적 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무개념을 매개로 한 인간의 행위는 우선 외적인 면에서 의무에 반하는 행위와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로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는 다시 동기 면에서 오로지 의무라서 행한, 의무 자체를 동기로 하는 행위와 기호나 경향(*inclination*)이 동기가 되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구별 가능하다. 이 구별이 실제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생명유지 의무와 관련된 사례이다.⁴⁾ 칸트에 따르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직접적 선호경향으로부터 자기 삶을 이어 가는 것은 어떤 내적인 가치나 도덕적 내용을 갖지 못하며, 단지 생명유지라는 의무에 외적으로 합치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에 비해 그 어떤 희망도 없는 비통함과 고단함, 불운함 속에서 죽음을 원하면서도 삶을 이어 갈 때, 그것은 삶에 대한 선호나 외경에서가 아니라 단지 의무라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고, 그 경우의 의지결정은 도덕적 의미내용을 가지게 된다.

www.kci.go.kr

3) *GMS*, pp.22-26, 33-35.

4) *GMS*, p.23.

2. 의지-행위의 원리로서의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여기서 다시 당위로서의 정언명령과 의무 개념이 도출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칸트 윤리학의 본질과 한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칸트에 따르면 자연계의 모든 사물은 법칙의 작용 하에 있다. 그에 비해 이성적 존재자는 법칙의 표상, 즉 원리(principle)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지닌다. 이 능력이 곧 의지이다.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표상을 통해 행위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표상-원리의 매개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것이 이성이다. 그런 점에서 의지의 작용은 행위-실천의 차원에서의 이성작용과 다르지 않다.⁵⁾ 실천적 관점에서 이성이 의지에 대해 지체 없이 작용하는 경우(이성이 의지를 확고하게 규정하는 경우), 이성에 의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는 의지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되어, 의지는 선호경향과는 무관하게 이성이 실천적 필연성을 지닌다고(선하다고) 인식한 것(만)을 실제로 선택하게 된다. 이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이런 선으로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는 실제로 이성 그 자체에 의해서만 규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경험적-주관적-우연적 요소들의 작용으로 인해 의지에 의해 의욕된 바 그 자체로는 이성과 결코 합치될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주관적-우연적인 제약조건 하의 인간존재자가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도덕적 행위들을 선택-실현하는 데에는 완벽한 이성존재자의 의지결정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의지결정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도덕적 강제이다. 즉, 주관적-경험적인 제약조건 하에서 객관적(도덕)법칙에 따르는 의지결정 및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도덕적 강제의 방식을 통해서이다. 강제란 전적으로 선호하지 않은 의지가 이성의 객관적 법칙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의지는 이성의 근거들을 통해 규정되지만 그럼에도 본성상 필연적으로 이에 합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지에 대해 작용하는 객관적 원리의 표상들이 필요하며, 이 표상들이 취하는 형식이 바로 강제이고 강제의 정식이 곧 명령(imperative)이다.⁶⁾ 명령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성의 객관적 법칙에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

5) *GMS*, p.41.

6) *GMS*, p.41.

는 의지에 대해 규정적으로 작용하는 강제-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적 명령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성의 표상(원리)가 제시됨으로써 의지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즉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 타당한 근거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의지는 실천적으로 선한 것이 된다는 점에서, 강제-명령은 인간 존재자에게 특화된 도덕화의 방식을 뜻한다. 명령은 의욕(의지) 일반을 규정하는 실천적 법칙의 객관적 완전성과 이성존재자의 (의지가 갖는) 주관적 제약성-불완전성 간의 불균형-비대칭 관계에 상응하는 의지원리들의 표상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실천적 명령을 설명함에 있어 칸트는 가언명령/정언 명령으로 구분한다.⁷⁾ 가언명령이란 인간이 원하는 무언가(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 어떤 가능한 행위가 갖는 실천적 필연성을 보여 주는 반면, 정언 명령은 행위를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정언명령의 경우 특정 행위를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이나 의도를 행위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특정 행위 자체를 직접 명령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 또는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행위의 형식과 행위 자체가 도출되어 나오는 원리에 맞추어 표현되어 있다.

칸트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정언명령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는 이런 정언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어떤 다른 전제조건과도 연관됨 없이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에 따르도록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지를 규정하는 실천적 법칙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칸트는 정언명령의 개념이 이미 정언명령에 고유한 정식까지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다. 무엇보다 정언명령은 표현구조상 ‘오로지 어떠한가에만 행위하라’라는 실천적 법칙 표상 이외에 오직 법칙에 합치되는 격률의 필연성만을 담고 있다. 여기서 법칙 자체는 스스로 제한되는 어떤 조건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행위의 격률이 가져야 하는 법칙 일반의 보편성(법칙으로서의 보편성)만이 남게 된다. 정언명령이 필연적이라고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격률의 합법칙성(법칙에의 합치성, 법칙화 가능성)뿐인 것이다. 이를 보여 주는 명령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것(격률)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격률에

7) *GMS*, pp.45-46.

따라서만 행위하라.”⁸⁾

결국 ‘보편법칙이 될 만한 주관적 의지-행위의 격률에 따르라’, 또는 ‘네 행위의 격률이 보편법칙이 되기를 의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요청으로서 이것이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변용으로서, 칸트에 따르면 현존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어떤 것, 목적 자체로서 특정한 법칙의 필연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정언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어떤 것은 바로 인간, 그리고 모든 이성존재자 일반이다. 이들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의지의 자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성존재자를 향한 모든 행위에서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이성존재자는 그 본성상 이미 자신을 목적 자체로서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현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객관적 목적으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만일 인간 의지에 대해 최고의 실천적 원리 내지 정언명령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의 표상을 통해 의지의 객관적 원리를 구성해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언명령은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너는 너에게서나 다른 모든 인격체에서 인간(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⁹⁾

3. 정언명령의 본질

이렇게 보편화 및 목적 자체성 명제를 담고 있는 정언명령으로 상징되는 칸트 윤리학은 그것이 내포한 극도의 이성주의나 엄격주의로 인해 과연 인간 존재자의 윤리로서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있어 왔다. 헤겔 역시 칸트의 이론은 인간이 늘 대면하는 일상의 윤리가 아닌 극단의 도덕, 예외의 도덕을 보여 줄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언명령으로 대표되는 칸

8) *GMS*, p.51.

9) *GMS*, p.61.

트 윤리학이 지닌 고유한 본질과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만하다. 칸트가 도덕성의 최고원리로서 제시한 정언명령, 그리고 그로부터 변용된 세 가지 하위정식들은 독백적 이성의 주관적인 자기강제의 절대화가 아닌가라는 인상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규범적 상호성을 전제하는 이성적 대화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이는 무엇보다 정언명령에 내포된 역지사지의 태도와 보편화 가능성의 관점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칸트의 규범적 출발점 내지 근본관심에 대해 살펴본다면, 칸트는 무엇보다 규범적 상대주의(relativism), 회의주의(skepticism) 및 교조주의(dogmatism)와 대결하였다.¹⁰⁾ 도덕적 판단의 가능성이나 그 근거에 관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태도들, 즉 규범의 문제를 판단 및 행위 결정에 작용하는 우연적이고 특수한 요소,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일회적이고 실존-독단적인 요소 등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태도들에 맞서 칸트는 바로 이 요소들의 작용에서 벗어난 의지 및 행위결정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런 점에서 칸트는 인간 의지 및 행위에 관한 규범적 언명 자체가 가능해지는 최소 전제조건 내지 가능조건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규범적인 근거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관한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이성적 인식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기본적으로 규범에 관한 독백적이고 주관적인 자기강제의 방식과는 다른 합리적 근거의 발견 및 그에 관한 보편적 인식과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이미 전제한 것이다.

4. 정언명령에 대한 비판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정언명령의 개념에는 무제약적인 선으로서의 선의지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정식화에 이르는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무제약적 선의 이념 및 실천법칙의 개념으로부터 정언명령의 근거를 도출시키는 데 대해서는 오해와 비판이 없지 않으

10) O. Höffe, "Kants kategorischer Imperativ als Kriterium des Sittlichen," *Ethik und Politik*, (Frankfurt, 1979), p.84.

며, 정언명령의 정식이 보편적 도덕의무를 가려내는 기준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서도 규범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¹¹⁾ 분석윤리학자 프랑케나는 보편법칙성이라는 칸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격률이 실제로 도덕 의무를 근거지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어두운 곳에서는 휘파람을 불라’거나 ‘왼쪽 신발끈을 먼저 묶어라’라는 격률은 보편법칙으로서 의욕될 수는 있으나, 누구도 이런 규칙의 준수를 의무로 여길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¹²⁾ 정언명령이 보다 설득력 있기 위해서는, ‘보편법칙으로서 의욕될 수 있는 격률은 의무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대신 ‘보편법칙으로서 의욕될 수 없는 격률은 비도덕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언명령의 정식은 의무 자체를 확인하기보다는 비도덕적인 격률을 가려내는 기준으로서만 적합하며, 그럴 경우 정언명령의 정식으로써 비도덕적인 격률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서도 정언명령은 역시 불충분한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보편적 의욕-준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곧 그 행위를 도덕적 의무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며, 그런 점에서 정언명령은 규범적 의무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판단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이로부터 의무론적 윤리학의 특성과 한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5. 의무론적 윤리학

칸트의 정언명령 개념에 대한 비판들은 규범윤리학 또는 메타윤리학의 차원에서 고유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윤리학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펼쳐 이 각각의 입장과 비판의 세부논거들을 다루는 것은 또 다른 방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언명령 내지 당위의 불가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언명령이 갖는 윤리사적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란 도덕적 행위에 관한 학이라고 규정된다. 윤리학은 도덕성의(도덕성이 실현 또는 좌절되는)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인간행위를 고찰 대상으로 하며 도덕성 자체를 개념적으로 근거짓는 문제에도 관심을 둔다.

11) 위의 책, p.85.

12) W. K. Frankena, *Analytische Ethik, Eine Einführung* (München, 1972), p.52.

한편으로 도덕성은 인간행위를 특징짓는, 인간행위의 특징적 성격을 드러내는 개념(행위의 도덕성, 도덕적 행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에 관한 일정한 명제가 규범적-지시적으로 의미 있게끔 하는 근본원리와 연관된 개념(원리의 도덕성, 도덕적 원리)이다. 이런 윤리학은 일상적으로 도덕철학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과 도덕철학은 원래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철학이 윤리학까지 포괄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은 18세기 칸트를 통해서였다. 칸트 이래로 윤리학은 (칸트적인) 당위윤리로 대표되는 의무론적 윤리학과 고대적인 자기추구의 윤리에 기원을 둔 목적론적 윤리학으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었다. 의무론적 윤리학이 의무, 책임에 관하여 모두가 모두에게 준수-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들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목적론적 윤리학은 개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최종목표로부터 행위자 자신에게 좋은, 올바른 행위들을 찾고 실행하도록 충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무조건적 의무지움(객관적 의무)과 정언적 당위(정언명령)로 집약되는 칸트의 윤리학에 비하면, 고대의 윤리로서 등장했던 소피스트들은 주관주의, 상대주의 및 회의주의의 입장에서 서 있으면서도, 무엇보다 개인의 자기이해(이익)를 우위에 두었다.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덕은 논리와 함께 있으며 사회성 내지 보편성의 요구야말로 개인의 참된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됨으로써, 소피스트 윤리의 극단성이 조절될 수 있었다.¹³⁾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로 상징되는 고대의 윤리는 최고선을 지향하였고 이것이 윤리적인 것의 전제이자 최종목표였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행복 또는 성공적인 삶의 관점에서 그 밖의 것들이 평가되고 정당화되는 방식이었으며 개인의 최종목적으로부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구해야 할 바가 도출-정당화되는 목적론적 윤리의 세계 내지는 가언적 명령의 세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교부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학적 윤리학은 의무론적 요소들을 보다 강조하였다. 유일신이야말로 무제약적 명령의 최고입법자이자 심판자이고, 피조물인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대한 보장자로 표상되었다. 이런 절대자 신의 전능함으로 인해 한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으로부터 독립적인 세속화된 순수당위를 사유해 내기가 어려웠다.¹⁴⁾ 이런 의존-종속성과는

13) H. Krämer, *Integrative Ethik* (Frankfurt, 1995), p.9.

또 다른 한편으로, 신에 대한 헌신과 복종이 현세에서의 행복에 대한 기대나 내세에서의 구원에 대한 희망과는 분리된 채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경건주의(pietism) 및 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칸트에 있어서도 인간의 도덕적 삶의 가치와 현세적 삶(에서의 행복)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인간의 도덕성은 단지 그가 행복해질 만함(행복해질 만한 가치 있음)을 드러낼 뿐, 결코 현세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되었다. 행복에 대한 종교적 보장이 아니라 행복에 대한 인간적 희망에서 멈추는 칸트적 도덕성은 결국 경건주의적으로 추구된 세속주의 도덕 내지는 신적인 것에서 벗어난 순수 당위의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신의 지배를 대신하여 인간의 이성적 의지가 당위-의무의 범주를 유한한 인간의 방식대로 산출해냄으로써, 그 이전까지 신의 대리자 내지 모사물이었던 인간이 이제 신의 등가물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크라머는 칸트의 윤리학을 신학 없는 급진적 신학 윤리라고 표현한 바 있다.¹⁵⁾ 오직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오로지 의무라서(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순수당위의 탄생인 것이다. 이렇게 세속화된 이성윤리로서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정립된 당위윤리에는 그럼에도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한다. 칸트의 당위는 신-내세-구원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지만 인간의 주관적 의지-의욕-지향성에 충실한 것이기보다는 의지에 대해 무제약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법칙, 명령, 의무 규정에 기울어 있다. 신으로부터의 해방의 계기이자 신적 권위의 대체-경쟁물로 볼 수 있는 칸트의 당위는 그만큼 신에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의 무제약적 보편성과 절대적 구속력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칸트는 세속적이되 이성적인 인간의 실천적 능력에 기초하여 당위(요청)의 범주를 의무의 개념으로 재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율성 관념이 이성의 자기인식 및 자기입법의 차원에서 자기의무지움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으며, 이를 통해 당위요청이 규범적 타율 또는 자기강제와는 다른 차원의 내재화된 자율성의 도덕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해결 방식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의욕의 차원과 '해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이 공존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칸트 고유의,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은 해결

14) 위의 책, p.10.

15) 위의 책, p.11.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⁶⁾ 칸트는 (선으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자 하는 인간이 자기 의욕에 충실한 행위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경험적 제약성 내지 불완전성 때문이며, 그로 인해 당위의 개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즉 인간의 관점에서 도덕적이기 위해 의지결정-의욕실현은 당위법칙의 규정-의무의 실현으로 넘어가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당위는 주관적-경험적 한계 아래에서 인간이 취할 수밖에 없는 도덕화의 방식이다. 즉, 한편으로는 나의 의지를 규정하는 의무명령이 본래적 자아(나)를 밀어내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의지결정과 그에 따른 의욕-의도의 실현과정에서 목적과 수단 또는 조건과 결과의 연쇄를 반영하는 가언-조건적 명령이 작용하여 무제약적인 도덕화의 가능성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의무지움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의지작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지의 자기결정 가능성을 밀어내지 않는 당위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난제에 직면하여 칸트는 결국 이성적 의지-이성적 명령이라는 개념에 착안하였고, 자유로이 의욕하되 당위에 반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는 것이 해야 할 것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선택적 가능조건으로서 실천이성능력에 주목하였다. 이런 해결은 형이상학적 이원론뿐 아니라, 이성적/감각적 존재라는 인간학적 이원론에도 기대고 있다. 스스로 의욕하고 이를 추구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명령하고 이에 복종하는 이성이 가능하며 이성의 도덕적 인식(도덕법칙에 대한 의식)은 '이성의 사실'이라고 설명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작동가능하다고 단지 요청, 변명되는 형이상학의 차원(형이상학적 대상)이 아니라 경험적이면서 현상적-실존적이기도 한 무의식적 의식현상의 차원으로까지 형상화된 것이다. 이는 선으로부터 독립적일 뿐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주관적 정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내재적 윤리성만을 신뢰했던 칸트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칸트 윤리학이 갖는 문제점으로 비판되는 것은 무엇보다 당위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칸트의 무제약적 당위는 사실상 외재적 규율의 절대적 강제와 다를 바 없어서 그 어떤 자발적 지향성이나 동기부여의 힘을 갖기 어려우며 자연히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단지 외적 강제의 내면화를 거쳐 형성된 '자기강제를 의욕함'의 방식으로 당위는 동기부여되고 명령으로서 유

16) 위의 책, p.14.

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당위 자체의 (의욕으로의) 자기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당위와 의욕의 평행성으로 인해 바로 무제약적 당위의 절대적 구속력 및 그 타당 근거를 사실상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 이상 신이나 사회성 같은 외재적 근거가 아니어야 하고, 자기개성과 욕구를 담고 있는 자아로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칸트의 무제약적 당위 윤리를 윤리사적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중세적 신이 준신학적인 무제약적 당위를 통해 대체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고대의 윤리적 목표가 금욕적-자주적 덕을 통해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이 없는(신이 없이 신적인) 무제약적 당위이면서 행복(보상)이 없는 도덕성의 요청인 것이다. 신과 행복 모두를 배제한 (이들로부터 순화된) 칸트의 당위관념은 역설적이지만 도덕적 주체에게 무제약성과 자기초월성을 요구하는 전도된 신학주의, 그리고 스토아윤리의 자주적 덕으로부터 그것이 보장하는 내면적 행복까지 제거한 초경건주의로도 해석되어 왔다.¹⁷⁾ 바로 그런 점이 칸트 윤리학에 대한 비판, 즉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불충분-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무제약적이면서 무기력하지 않은 당위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의 요소, 즉 정언적인 것과는 다른 가언-조건적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에도 칸트는 이를 고려치 않았으며, 결국 윤리적 동기부여 및 목적의 부재-불충분성의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즉 ‘당위 자체는 자기목적적 성격을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이 세계의 최종목적이다’라는 ‘정언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였다.¹⁸⁾

6. 의무론적 윤리학의 난제

의무론적 윤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라는 관점에서 칸트의 무제약적 당위명령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당위개념의 비현실성 문제가 제기된다. 칸트에게서 당위는 규범적 보편타당성 및 자기완결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무제약적-정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코 인간존재자의 의지나 지향성과는 합치될 수

17) 위의 책, pp.20-21.

18) 위의 책, p.21.

없는 초월적-형이상학적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그리고 당위에서의 상호성의 부재라는 문제가 있다. 당위는 존재사물이나 상황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규범세계 내에서 인간존재자가 해야 할 바에 관한 지시규정이요, 그런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인간주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다. 당위의 정립과 실현 작용은 결국 개인적-집단적인 수준의 의지의 작용을 전제하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의지의 작용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위는 의지와 의 상호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규범성이다. 그러나 당위의 순수 무제약성과 의지의 경험적 제약성에서 출발했던 칸트는 당위가 의지를 어떻게 보편적-필연적으로 지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 시킴으로써 절대적-무제약적 당위 대 이원적(경험적) 인간 존재자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도덕성의 실현에 있어서 개별 존재자들의 자기의지의 실현작용 및 행위자로서의 형성 과정의 문제는 지나쳐 버렸다.

그렇게 보면 칸트 이후의 다양한 윤리적 시도들은 바로 이런 칸트 윤리학의 문제와의 생산적 대결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위의 인간화, 절대적 당위와 인간 의지의 상호 관계-균형성의 문제이다. 이른바 신칸트적 프로젝트(neo-Kantian project)라고 할 만한 칸트 윤리학의 재구성 시도로서 주목할 만한 것이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neo-Kantian constructivism)이다.¹⁹⁾

19) 코스가드의 주요문헌으로는: Ch. Korsgaard,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New York, 1996); 김양현, 강현정 역, 『목적의 왕국』(철학과현실사, 2007); *The Source of Normativity*, Cambridge, 1996; 강현정, 김양현 역, 『규범성의 원천』(철학과 현실사, 2011); *The Constitution of Agency*(Oxford, 2008); *Self-constitution: agency, identity, and integrity.*, Oxford, 2009; "Self-constitution in the Ethics of Plato and Kant," *The Journal of Ethics* 3(1999), pp.1-29; "Acting for a Reason," *Danish Yearbook of Philosophy* 40(2005), pp.11-35.

III.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1. 칸트 윤리학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칸트주의자 코스가드는 자신의 고유한 메타윤리적 입장에서 구성주의에 기초해 칸트의 재해석 내지 재구성에 힘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 구성주의의 기본견해에 따르면, 규범적 진리란 합리적 숙고나 동의의 과정 등 구성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가치판단의 정당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해 다루는 규범윤리학과 가치판단 기준(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인식방법에 관해 다루는 메타 윤리학으로 나누어 볼 때, 규범윤리학의 관점 내지는 일차질서적 도덕적 판단(first-order moral account)의 관점에서 ‘어떤 도덕 원리가 올바른가’라는 물음에 대해 구성주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올바른 도덕원리들은 이상적이거나 가설적인 합리적 숙고 과정 같은 일정한 구성적 절차를 통해 우리가 동의 또는 승인하게 될 원리들이다’라고 답할 것이며, 메타윤리학적 관점에서 ‘규범적 진리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성질을 갖는가’라는 물음에는 ‘규범적 진리는 실천적 관점과는 독립된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상황조건 하에서 실천적 구성의 절차를 거쳐 또는 구성 절차 자체로서 드러난다’고 답할 것이다.

특히 코스가드의 이론을 포함하여 칸트 윤리학에 기반한 칸트적 구성주의(Kantian constructivism)는 합리적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숙고로부터 규범적-도덕적 진리의 본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도덕적이게 되는 이유는 욕망이나 이해관계 등이 아니라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본성에 기인한다. 특히 도덕적이게 되는 이유가 실천이성의 요구인 한, 도덕적 의무들은 모든 합리적 존재자에 대해 보편적-필연적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물론 칸트 스스로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거나 옹호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적어도 존 롤즈가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 것은 분명하다.²⁰⁾ 그에 따르면 칸트는 특히 의무

20) J. Rawls,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77,

개념의 전개에 있어서 일종의 구성주의를 취하였다. 칸트에게서 도덕적 의무의 인식과 이행은 주관적-경험적 조건상황에 좌우되거나 외적-타율적인 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로부터, 특히 실천이성에 의해 자율적,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덕규범의 정립은 다른 가치나 이익, 욕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자신에 의해 자율적-자기입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덕-규범성은 이성의 활동 자체에 이미 내재해 있고 또 그런 이성의 활동에 대해 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성이 자율적-자기입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보편적 도덕규범을 정립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규범이 자율적-자기입법적으로 활동하는 진정한 이성을 찾아낼(가려낼) 수 있다. 이런 이성과 도덕규범의 칸트적 표현이 실천이성과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은 자율적 이성이 스스로 정립한 규범적 산물이자 실천이성의 보편적 원리이고, 행위 또는 행위자에 대해 구성적 원리가 된다. 정언명령을 통해 행위의 주관적 동기를 포함하는 격률이 보편법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고 그럼으로써 행위 또는 행위자의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언명령의 테스트는 합리적 행위자성 또는 일종의 규범적 진리성에 관한 구성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천이성과 정언명령에 기초한 규범적 구성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칸트의 윤리학으로부터 코스가드는 실천이성에 대한 일종의 절차주의로서 자기 고유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전개하였다.²¹⁾ 코스가드는 무엇보다 자율성을 인간 행위의 본질로 파악했으며, 초기에는 반성적 승인(reflective endorsement)

no.9(1980), pp.515-572; 강준호, “칸트적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편, 『인문학연구』 Vol.11(2007), pp.199-224; 김정주, “이성의 사실과 도덕적 구성주의의 정당화—칸트와 롤스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연구,” 한국칸트학회 편, 『칸트연구』 Vol.21(2008), pp.163-197; 맹주만, “롤스,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한국칸트학회 편, 『칸트연구』 Vol.20(2007), pp.117-150.

21) 노영란, “행위와 행위자: Christine M. Korsgaard의 자아구성으로서의 행위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철학회 편, 『철학』 Vol.117(2013), p.229;

코스가드의 규범성 해설에 대한 간략한 정리로는: Sylvie Delacroix/권경휘 역, “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대조적인 개념,” 연세법학회 편, 『연세법학』 26권(2015), pp.266-267.

또는 실천적 정체성(practical identity)을 구성절차의 핵심으로 보았던 데 비해 후기에는 통합된 행위자를 형성해 내는 자아구성(self-constitution)개념에 보다 집중하였다.²²⁾ 물론 실천적 정체성의 형성과 자아구성의 과정은 본질을 달리 하지 않는다. 그의 입장은 구조주의(구성주의, constitutivism)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규범적 원리를 구성절차의 산물로 본다기보다는 규범적 원리가 구성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 특히 후기에는 규범적 원리가 행위나 행위자를 구성하는 규범이며 따라서 이런 구성적 규범 없이는 행위나 행위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데에 기인한다.²³⁾ 규범적 원리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행위자로 구성하게 되며, 그런 점에서 규범적 원리가 곧 인간 자신의 구성(constitution)이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나 자신이 취한 규범적 원리가 곧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또는 나라는 인간의 구조이다.

코스가드의 구상은 무엇보다 실천이성의 규범성을 의지나 행위의 구성적 원리에 기초지우려는(또는 구성적 원리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또는 도덕성을 합리성에 기초지우려는(또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상호변환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위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행위함(acting for a reason)’으로써 어떻게 능동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스스로를 구성해 가는지 보여 주려 한다. 그의 견해로는 특정한 규범적 근거와 의무들은 초월적-외적 명령이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실천적 정체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은 단지 보편적 명령에 복종하는 수범자 또는 부과된 의무의 이행자인 것이 아니라 자기 정신의 반성적 구조에 기초하여 실천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런 규범적 자기의식-자기구상에 따라 규범성을 실현해 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그에게서는 정체성 및 행위자성이 실천적 규범성 문제의 핵심 개념

22) 노영란, “롤즈 이후의 칸트적 구성주의: 구성주의의 딜레마와 존재론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윤리학회 편, 『윤리연구』, 106권(2016), pp.43-44.

23) 코스가드는 전기의 신칸트적 구성주의와 신플라톤적 도덕심리학을 결합하여 구성(constitution)을 강조하는 후기의 신칸트적 구성주의(구조주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후기의 입장을 보여 주는 문헌으로는 특히 *Self-constitution: agency, identity, and integrity.*, Oxford, 2009; “Self-constitution in the Ethics of Plato and Kant,” *The Journal of Ethics* 3(1999), pp.1-29.

이 된다. 행위자로서 우리는 자기 행위와 삶에 있어 일정한 이유에 따라 움직이며, 이 이유는 단순한 동기유인과는 다른 차원의 행위가능성을 열어 준다. 우리는 직접적 동기(욕구)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하도록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동기로부터 반성적 거리를 둔 채 어떤 동기(욕구)에 따라 행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숙고를 통해 행위결정의 원리 내지 법칙을 스스로 설정하는 과정이며, 이 원리와 법칙은 곧 우리 자신의 실천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모든 욕구와 동기들을 조망하며 조절하는 가운데 자기 이유와 의무들을 찾아가는 ‘숙고하는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에 의해 우리의 규범적 지평은 열리게 된다. 이 실천적 정체성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human identity)을 근본적인 배경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위 이유와 의무들의 기원이자 규범성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코스가드에게서 인간의 통합성, 정체성 및 행위자성은 합리적 규범성 및 도덕성에 불가결하다. 칸트 식으로 표현하면,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도덕성은 자아감이 빠진 형식적 도덕성으로서 공허하며, 도덕성으로 향하지 않는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은 통합성도 일관성도 없는 무심한 맹목일 수 있다.

2. 실천적 정체성 개념

인간이 소외-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칸트적 도덕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성 및 자아의 구성적 특징과 도덕성을 연관짓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의 정체성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탐구했던 코스가드에게 있어서 핵심개념이 되는 규범성이란 어떤 요구가 권위를 갖는 근거들 및 그런 요구가 실행되는 심리적 메커니즘과 관련된다. 즉 어떤 요구가 왜 권위나 정당성을 갖는지(규범적 근거), 그 요구는 어떻게 실행되는지(규범적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개념이다. 또 다른 주요 개념으로서 행위(action) 역시 특징적이다. 행위는 환경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재현이나 해야 할 바에 대한 표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특정한 의도-내용을 가지고 자기 안의 변화를 통해 세계 내의 변화를 야기하는 지적 운동이다. 특히 인간의 행위는 능동적인 법칙의 표상작용을 통해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위한 원

인이 되도록 결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²⁴⁾ 칸트가 분류한 가언명령/정언명령의 개념과 연관지어 보면, 가언명령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어떤 목적의 원인이 되도록 (행위)결정하는 데 있어 (그 설정된 목적에 대한) 수단을 자기목적적으로 설정하게 되며, 정언명령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어떤 목적의 원인이 되도록 (행위)결정하는 데 있어 수단-목적과 무관한 보편법칙에의 합치성이 본질적이다. 이런 행위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인간의 자아구성 내지는 행위자성의 구성인데, 행위를 통해 형성된 행위자성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자율성(autonomy)과 효율성(efficacy)이다.²⁵⁾ 행위자로서는 가언적 명령을 행위의 법칙으로 취할 때 최대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으며, 정언명령을 행위의 법칙으로 취한다면 최대한의 자율성에 이르게 된다. 가언명령/정언명령들에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간은 효율적이거나 자율적인 행위자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세밀한 칸트의 도덕심리학적 개념 설명에 따르면, 어떤 대상의 재현으로부터 (그 대상을 의욕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때 그 대상은 행위의 유인동기(incentive)이며, 그런 유인에 대해 주체가 취하는 반응을 기술한 것이 바로 행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존재자의 행위원리란 어떤 유인을 행위의 이유로서 취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다루는 합리적 원리일 것이다. 이를 인간존재자의 자아구성과 연관지어 인간존재자는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과성의 법칙(law of her own causality)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즉 특정 목적-수단연관적 유인과 격률의 보편성 중 어느 쪽을 자기행위의 이유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정체성을 달리 형성해 가게 된다.²⁶⁾

24) Ch. Korsgaard, *Self-constitution: agency, identity, and integrity* (Oxford, 2009) (이하 *self-constitution*), p.81.

25) *Self-constitution*, pp.82-84.

26) 코스가드는 실제로 자율성 또는 자기결정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의미는 '네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네 의지를 규정하는 원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중 두 번째 의미의 자율성은 자발성(spontaneity)이라는 보다 깊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의미의 자율성은 동물적 존재자에게도 가능하지만, 두 번째 의미의 자율성은 오직 책임 있는 행위자에게만 가능하다: *Self-constitution*, p.108.

3. 정신의 능력-속성들

이런 행위선택에서 작동하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나 속성들로 본능, 지성, 자의식 등이 있다. 본능이 유인동기와 그에 대한 반응(여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속성)이라면, 지성은 이런 유인이 되는 대상 또는 이미 확립된 유인-반응 관계의 실제적 중요성에 관한 학습화 능력이다. 그에 비해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적 상태로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자신의 유인동기에 주의를 돌리는 능력은 곧 그 유인들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이 유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행위할 이유를 제공하는가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고,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곧 (자기 행위에 관한) 합리적 원리를 선택하는 과정과 같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자기의식은 결국 유인으로부터 이유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의식의 발달은 그런 점에서 본능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선택 가능한 목적들을 늘리고 그에 필요한 행위 선택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정신 작용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 자기의식의 발달에 의해 한편으로 행위선택의 이유는 단순한 유인본능과 분리될 수 있고, 유인은 주관적인 경향(inclination)으로 변화될 수 있다.²⁷⁾

정신의 이런 분리된 능력-역할에 기초하여 정신의 부분적인 숙고 역시 가능해진다. 숙고란 행위선택의 차원에서 주체 자신의 인과적 원인성의 법칙을

27) *Self-constitution*, pp.120-121. '나는 경향을 지닌다'라는 말은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유인동기의 작용을 의식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주관적 경향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대해 기본적으로 적합한 형식을 지녀서(적합하다고 의식되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나로 하여금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경향은 우리에게 행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실주의자라면 경향이란 어떤 대상의 좋은 속성에 대한 반응일 뿐이므로, 행위의 이유를 주는 것은 경향 자체가 아니라 그 좋은 속성뿐이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경향이란 유인동기에 대한 반응이자 나에게 대한 적합성의 형식(나에 대해 적합한가를 담는 형식)으로서, 어떤 대상이 가치 있고 그것을 위해 행위할 이유를 주도록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과 더불어 바로 그것의 (나에 대한) 적합성이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경향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의식은 나에게 (행위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택하는 작업이다. 이 숙고를 통해 주체가 선택한 법칙이 수단-목적의 인과적 원인성의 법칙이라면, 가언명령이 주체를 지배하는 것이고, 주체가 선택한 법칙이 어떤 조건에도 제약되지 않는 주체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인과적 원인성의 법칙이라면 정언명령이 주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결국 본능, 지성, 자의식 등 정신의 분리가능한 요소-능력들의 중첩 작용 속에서 정언명령 및 이성의 원리를 택한다는 것은 주체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인과적 원인성의 법칙을 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체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보편적 도덕법칙을 원하는 나라는 정체성)의 형식을 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그러면 왜, 어떻게 정언명령/가언명령은 개별 행위선택에 대한 결정을 넘어 자기의식적인 행위자(의 정체성)에 대해 규범적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것이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자기의식적인 행위자로서는 자기의지의 형성이 과제이고 이를 위해 자기의지의 법칙이 필요하다.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행위자성이다.

4. 행위자성(agency)

모든 행위에는 우선 행위자성이 요구되며, 또 행위자로서는 정체성의 통일(단일 정체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체성과 행위의 관계를 보면, 정체성은(행위자의) 어떤 선택-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체성이 행위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²⁸⁾ 어떤 인격체가 스스로를 자기 행위의 저자(author)로서 구성해 내는 데에는 개별 선택-행위가 그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행위란 정체성의 통일적 형성에 필수적이고, 모든 행위는 곧 정체성의 구성 행위 내지 자아 구성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정체성-자아구성의 관점에서 좋은 행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다. 행위를 위해서는 우선 행위자성이 요구되고, 행위자로서는 정체성의 통일이 필요한데 이 정체성의 통일은 개별 행위나 선택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좋은 행위란 자신을 잘 구성해주는 행위 내지는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견고히 통일시키는 행위로서, (나쁜 행위에 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완벽한 행위라고

28) *Self-constitution*, p.19.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구성주의적 관점의 행위설명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행위에 의해 비로소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미 행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게끔 하는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며, 만일 행위자로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럼에도 정체성 및 자아구성을 필요로 하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것이 구성주의적 설명에 내재한 순환적 역설(자아구성의 역설, Paradox of self-constitution)을 보여 준다.²⁹⁾ 이에 대해 코스가드는 행위를 통해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것이 곧 인간의 삶의 형식이며, 행위는 자아의 산물이 되기보다는 자아구성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역설은 실제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5. 정체성과 규범성

근본적으로 코스가드가 이런 역설을 감수한 채 규범성의 근거 문제에 대해 자아구성적 정체성 형성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정언명령으로 대표되는 칸트적 도덕성-규범성의 문제를 보다 더 잘 설명해 내기 위한 것이다. 즉, 정언명령이라는 무조건적 당위-명령의 형식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의무 관념이 한편으로는 가장 완벽한 도덕성을 가능케 하지만, 근거와 작동 방식-메커니즘 면에서 외재적-타율적-강제적으로도 보인다는 점에서, 이 규범성의 원리로부터 행위자에게는 어떤 동기부여가 가능한가, 즉 무제약적 명령과 절대적 의무의 '원리'가 행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선 그는 칸트의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성-규범성의 원리와 행위로의 동기부여를 연결시켜 이 동기부여에서 인간정신, 특히 이성 은 어떻게 작용-역할하는가를 추적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성(reason)과 정서(passion)가 정신 작용의 두 요소이며, 정신의 작용은 이성과

29) *Self-constitution*, pp.20, 35, 41-42; B. N. Seeman, "The "Paradox of self-constitution" and Korsgaard's two Conceptions of Maxims for Action," *Metaphilosophy*, Vol.47, No.2(2016), pp.233-250.

정서가 특정한 방식으로 관계하며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정신작용의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한다. 이른바 전투모델(투쟁모델, Combat Model)과 구성적 모델(Constitutional Model)이 그것이다.³⁰⁾ 전투모델에 따르면 (인간정신 능력의 두 요소인) 이성(reason)과 정서(passion)가 정신을 통제-지배하기 위해 서로 간에 투쟁한다. 이 모델에서는 이성과 정서가 마치 행위자를 대신하는 듯이 설명됨으로써 사실상 행위자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구성적 모델에 따르면 행위자는 자신의 정체성 구조와 동일시되고, 인간 정신능력의 두 요소인 이성 대 정서(또는 경향)이 한 인격체의 구성적 구조(한 인격 구성체) 안에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행위자가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그것은 행위자가 바로 이성과 동일시되어서가 아니라 행위자가 우선 자기 정체성의 구조와 동일시되고 이 구조에 기초하여 이성에게 지배적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아구성적 정체성 구조 안에서 정신(soul)능력의 두 요소인 이성 또는 정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당받아 수행함으로써 한 인간은 비로소 자기 행위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투모델과 구성적 모델이라는 정신작용에 관한 대립적 모델에서 출발하여 코스가드는 칸트의 이론 전개가 구성적 모델을 통해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³¹⁾ 구체적으로는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원론>에 기초하여 무제약적 정언명령이 본질적으로는 합리적 의지(rational will)의 자기입법에 따른 법칙임을 밝히려 한다. 우선 그는 칸트의 이론 전개가 ‘당신이 합리적 존재인 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합리적 존재인 한 당신은 (자연적-기계적 필연성과는 다른) 자유의 이념 하에서 행위할 수 있다. 그런 자유로운 의지는 어떤 외부의 다른 원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즉, 자유의지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지향성에 의해 좌우된 일회적-타율적-종속적 의지결정과는 다른 것일 수 있기에, 만일 당신의 자유의지가 작동한다면, 당신은 타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취한 행동 역시 외부의 법칙과는 다른 어떤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어서 무언가 행위의 법칙을 필요로 하는데, 그

30) *Self-constitution*, pp.153-158; Ch. Korsgaard, "Self-constitution in the Ethics of Plato and Kant," *The Journal of Ethics* 3 (1999), pp.10-15.

31) Ch. Korsgaard, 위의 글, pp.10-12.

법칙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결국 코스가드에 따르면, 의지결정이 타율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의지에 대한 법칙의 작용이 일방적-기계적-인과적 규정작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의지결정에 있어 어떤 법칙에 따르되 자율적일 수 있는 것은 의지에 작용한 법칙이 어떤 외부의 법칙이 아니라 스스로가 입법하여 스스로에게 부과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합리적인 한 정언명령(스스로 입법하여 부과한 법칙)이 바로 당신의 의지의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의지-비타율성-자기입법성-자율성으로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정언명령과 자유의지(합리적 의지)가 규범적 관점에서 결코 상호배제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려는 코스가드는 그 근거체시의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숙고하는지에 집중한다. 이 숙고에서도 역시 출발전제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녀서 자기 외부의 어떤 것이 부여한 법칙에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이 따를 법칙을 스스로 입법하는 자기지배적 존재라는 점이다. 이런 존재자로서 구체적 행위를 결정하는 숙고 과정을 보면, 우선 유인동기의 단계에서 어떤 대상이 즐거운 것으로 재현되고 그것이 유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작용한다고 의식하게 될 경우, 인간은 그 대상에 대한 경향을 지니게 된다. 이 경향성은 이제 그 선호 대상에 관련된 (행위)제안의 형태로 이어진다. 즉, 즐거움을 주는 특정 선호 대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 대상을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한다. 그에 이어 도구적 이성이 이 목적을 실현할 수단이 되는 행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제안으로써 최종적으로 숙고과정은 완성된다.

여기서 만일 인간의 의지가 타율적이라면,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대상이 주는 즐거움 자체가 곧 의지를 규정하는 법칙이 된다. 반면 인간의 의지가 자율적이라면 즐거움 자체가 결코 법칙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스스로를 원인으로 하는 의지의 법칙이 필요해진다. 자율성의 관점에서 이제 질문 또는 제안은 (즐거움을 주는 어떤 대상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인가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즐거움을 주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나의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되는 특정 행위를 하라’는 주관적 의지의 격률을 보편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특정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적 행위 간의 관계 설정 하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 특정한 수단적 행위를 하라는 격률이 정언명령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이다. 정언명령은 그런 점에서 합리적 의지가 스스로 입법하는 의지로서 취해야 하는 보편법칙성을 가장 완벽하게 형식화시킨 명령이고, 달리 표현하면 합리적 의지 스스로가 설정한 주관적 격률이 그런 보편법칙성을 충족시키는지를 판단케 하는 테스트 형식과 같다. 경향이 제안하고 이성(합리적 의지)이 그 제안대로 행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결국 (내용상) 제안-행위 연쇄의 보편타당성 내지는 (형식상) 제안-행위 연쇄의 보편법칙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렇게 규범성의 실현 과정에서 본질적인 합리적 의지 및 이성의 결정과 관련하여 코스가드는 이것이 결코 선호경향이나 정서를 압도하는 이성의 독단적-전제적 지배라고 보지 않는다. 규범성 실현과 관련된 정신작용에 있어서는 여러 기능작용 요소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특정 요소(이성)가 다른 것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규범적 행위-선택의 실현은 보다 총체적인 정신적-자의식적 작용의 영역인 것이다. 즉 다양한 규정요소들의 작용 하에 개별적 선택-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의 통일 내지는 자아 구성이 가능해지며 이로부터 점차 행위자성이 형성-완성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아구성적 정체성 및 행위자성이 정립될 때 비로소 의지결정-행위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지의 규범성-자율성이 실현 가능해진다. 도덕성-규범성의 실현은 이성 자체가 아니라 보다 상위의 정신작용, 보다 통일적인 정체성, 보다 능동적인 자아구성에서 비롯되며, 이 인격적 자기구성체로서의 행위자가 이성에 지배적 역할기능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코스가드는 정신의 전투모델이 아닌 구성적 모델이 바로 칸트의 규범성 모델이고, 이 규범성 모델이 무제약적-절대적 정언명령이 어떻게 합리적인 의지-자유로운 의지가 스스로 취하는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적절히 설명해 준다고 여겼다. 칸트의 관점에서는 도덕성의 실현을 위해 이성이 지배해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성 자체와 동일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에 앞서 우리의 통일적 정체성 또는 자아구성적

구조를 형성해 내고 그것이 비로소 이성이 지배하도록 역할을 규정-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스가드는 이런 구성적 모델을 취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행위의 본성과 관련해 어떤 행위-운동이 어떻게 행위자에게 그 자신의 것으로 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정언 명령과 같은 의지의 형식적 원리가 행위의 구성적 원리들인지도 보여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행위자는 그가 행위하는 한 전적으로 정언명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만) 행위하게 된다. 이로부터 난제가 등장한다. 나쁜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악한 행위의 문제이다.³²⁾ 인간이 견고한 정체성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잘못된 법칙(wrong law)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구성적 모델에 따르면 인격체는 자신의 자아구성 내지 정체성 구조와 일치되게 행위할 때 좋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만약 이성이 정서를 지배한다면 그는 이성과 일치되게 행위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과의 동일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아구성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그것이 이성으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자율적인 행위, 즉 정언명령에 의해 지배되는 행위만이 자기 정체성 내지 자아구성에 합치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행위이고 나쁜 혹은 타율적 행위는 우리 안의 욕망이나 경향에 의해 야기된 돌발 사태일 뿐이라면, 그럴 경우 나쁜 또는 타율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귀속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행위를 애초에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다.

칸트의 논거에 집중해 보면, 행위에 필수적인 형이상학적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자율성이고, 그런 속성은 규범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격률의 보편화 가능성과 같다. 자율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요소는 행위를 단순한 사태사건과 구별지어 행위자에게 귀속가능한 것이 되게 하는 행위의 필수적 특징이다. 행위가 누군가 안에서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격체로서 행한 것이 되는 것은 자율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내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나의 것(행위)이라면 그 행위는 내 안의 어떤 힘이 아닌 나라는 통일적 자아구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외부로부

www.kci.go.kr

32) *Self-constitution*, pp.32-44, 159-176; Ch. Korsgaard, "Self-constitution in the Ethics of Plato and Kant," *The Journal of Ethics* 3 (1999), pp.15-20, 23-29.

터 나에게 부과된 법칙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부과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나의 행위가기 위해 요구되는 자율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속성은 결국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속성을 이미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다.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는 규범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좋은 선한 행위)만이 곧 행위인 것이 되어 나쁜 행위라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없게 된다. 보편화 가능한 격률에 따른 행위가 행위로서(as actions) 좋은 것이고, 정언명령에 반하는 행위는 아예 행위가 아닌 것이다. 이를 행위 주체와 연관지어 보면, 행위를 통해 주체의 통합성 또는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좋은 행위는 그 주체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위자로 만들어 주는 행위이고, 나쁜 행위는 타율성 및 정체성의 결함을 낳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코스가드는 칸트의 <단순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로부터 실마리를 찾는다. 나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나 경향에 의해 전적으로 압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애(self-love)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 자 내지는 자신의 경향을 어떤 더 이상의 숙고 없이 자기 행위의 이유로서 취한 자이며, 자연의 유인에 의해 지배되도록 스스로 동의한 자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행위자성을 구성하는 데 실패하게 만드는 법칙을 나쁜 법칙(wrong law)이라고 보면 자기애의 원리는 자기 정체성-행위자성을 약화시키는 나쁜 법칙이고, 그런 자기애의 원리에 기초한 행위는 (아예 행위가 아니라기보다는) 자기 정체성-행위자성을 약화시키는 나쁜 법칙에 의해 지배된 결함 있는 행위(defective action)가 된다. 결국 코스가드의 관점에서 좋은(선한) 인간은 자기 개별 행위와 선택에 기초하여 견고한 자아구성-정체성 구조를 형성해 낸 자이고 바로 그런 자아구성 하에서 정신요소들의 역할분담에 의해 의지 및 행위결정이 정서보다 이성에 의해 주도되는 자 또는 안정적인 자아구성 및 견고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기근거를 가지고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6. 코스가드에 대한 비판

코스가드가 규범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제시한 행위자성 관념은, 우리의 행위가 도덕명령에 대한 자기강제적 복종의 기제 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자연적 욕구-충동유인의 작용이라는 양자택일적—그 어느쪽도 반감지 않

은—해석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한다. 우리가 도덕적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위법칙에 복종함으로써라기보다 우리 스스로 그럴 이유를 찾아 그 이유로 인해 행위하기 때문이다. 코스가드의 이유로 인한 행위(acting for a reason)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신뢰-욕구 모델(belief-desire model)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³³⁾ 후자의 모델에 따르면 행위는 ‘내가 어떤 욕구를 느낌—어떤 행위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음—그 행위를 함’이라는 연쇄과정 속에 자리잡고 있다. 신뢰와 욕구가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의 행위에 대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코스가드의 모델로는 나의 어떤 신뢰-욕구가 직접 행위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욕구의 결합에 관한) 어떤 고려 내용이 행위의 이유가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이 인식이 나로 하여금 행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 행위에는 신뢰와 욕구 간의 적절한 개념적 연결을 행위의 이유로 인식하고 이 인식을 통해 비로소 행위로 동기부여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합리적 행위란 내 안에서 신뢰와 욕구가 직접 작동한 결과라기보다는 신뢰와 욕구를 행위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나서 행위로 나아가는 나 자신의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의 표현이다. 그렇게 행위자는 욕구나 신뢰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에 의해 인도된다. 일정한 고려내용을 이유로서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나는 행위로 동기부여되는 것이고 나는 이유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유로 인해 행위하도록’ 인도하는 조건(이유에 의해 행위로 인도되는 조건, guidance condition)이다.³⁴⁾

이런 행위 설명에 대해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이 바로 무한소급의 문제(Regress Problem)이다.³⁵⁾ 욕구와 욕구충족의 수단에 대한 믿음이 곧바로 행위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설명모델에 대해 코스가드는 그럴 경우 행위는 행위에 대한 이유가 빠진 채 (욕구와 믿음에 의해) 행위하도록 맹목적으로 조건지어진 것뿐이며 이런 행위로의 맹목적인 조건화 상황에서는 행위의 합리성이 행위

33) A. J. McAninch, “Acting for a Reason and Following a Principle,”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ume 18, Issue 3 (2015) pp.650-652.

34) 위의 글, pp.649-661.

35) 위의 글, pp.649-655.

자 자신에게 귀속될 수도 없다고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행위욕구와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욕구와 믿음이 나에게 이유가 된다는 인식 또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 맞서서는, 욕구와 믿음에 관한 어떤 속고를 나의 행위의 이유로 인식하는 것 역시 맹목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일 수 있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어떤(주관적) 요소를 내 행위의 이유로 인식하는 것 역시 그런 인식행위에 대한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자에게 맹목적인 조건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주관적 요소를 행위의 이유가 된다고 인식하는 것(행위) 역시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라고 인식되지 못한 채) 행위자 안에서 작동한 어떤 다른 주관적 태도의 산물일 수 있다. 즉 '어떤 믿음과 욕구가 내 행위의 이유가 된다'라고 내가 인식하는 데에는, 그것(태도)이 이유라고 인식되지 못한 채 작용한 어떤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든 행위로의 동기부여에는 이유로 인식되지 못했으나 작용한 어떤 주관적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주관적 요소들을 이유로서 인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렇게 보면 모든 이유 인식작업(이유를 인식하는 반성적 판단)에는 그 이유인식 자체에 관련된 반성적 판단(행위에 대한 최초의 이유 인식행위, 그 인식행위의 이유에 대한 인식행위, 다시 그 인식행위의 이유에 대한 인식행위...)이 무한히 소급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반성적 인식행위의 무한소급의 문제는 코스가드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코스가드가 해결하려 했던 바를 칸트의 구상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해결되었고 무엇이 여전히 문제인지 좀 더 명확해진다. 칸트와 코스가드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의지결정 및 행위에 있어 합리적 이성뿐 아니라 주관적 정서나 경향으로부터 영향받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칸트로서는 이런 주관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무제약적이고 보편적인 당위명령과 의무 법칙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방식은 실천이성(의지에 작용하는 이성)이 스스로 보편적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에게 부과함으로써 도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식이었다. 절대적인 당위명령에 대한 복종 또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의 준수에 곧 실천이성의 자율적 자기입법-자기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코스가드는 인간의 규범성은 당위명령-의무법칙의 지배 작용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행위자로서 실천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그

에 따라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규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선의지를 지닌 인간, 그 선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위명령 또는 의무법칙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에 기꺼이 복종하는 실천적 이성능력을 지닌 인간에 기초하는 것이 칸트라면, 코스가드는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인간, 그 자유의지 하에서 행위자성을 스스로 구성해 가고 그런 자아구성 하에서 행위의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여 그 이유 때문에(만) 올바르게 행위하는 실천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에 기초해 있다. 자기입법적 실천 이성 대 자아구성적 정체성, 의무감(의무의식) 대 자아감(자의식)의 구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코스가드는 규범성의 실현에 있어 인간의 선의지 자체보다는 한층 포괄적인 자유 의지, 실천이성의 자기입법적 작용보다는 한층 통합적인 정신의 자아구성적 작용, 당위명령 및 도덕적 원리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숙고를 통해 이유를 인식하고 그 때문에 행위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여겼다. 실천이성의 유일한 원리로서 의지에 대해 지시하고 명령하는 정언명령은 의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이끄는 의지의 실천적 원리로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언명령은 단지 '도덕적' 행위의 보편적 형식일 뿐 아니라 '합리적' 행위의 보편적 형식일 수 있으며 도덕적 행위란 합리적 행위 중 가장 완벽한 형식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코스가드의 구성주의는 도덕적 진리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제일원리나 객관적 가치들을 따로 찾지 않는다. 그 대신 도덕적 진리의 기준들에 관해 자기인증적 설명(self-authenticating account)에 의존할 뿐이다. 즉 외재적인 도덕적 기초들을 살피고 찾기보다는 우리의 정신과 의지, 또는 정체성 구조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합리적 행위들에 내재해 있고 또 그에 대해 구성적인 어떤 올바름의 기준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명한 이성, 스스로에게 자명한 이유로써 도덕적 진리-객관성의 문제에 답할 수 있다는 그의 견해는 칸트주의자-이성주의자로서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V. 맺는 말

전체적으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에 대한 코스가드의 구성주의적 해석은 규범성에 관한 메타윤리적 논증이라기보다는 인간학적 서술에 가까우며, 인간의 합리성과 자유의지성에 대한 과도한 전제, 그리고 행위와 자아구성을 오가는 순환논리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그의 이론이 부인할 수 없는 흡인력을 지니는 것은 실천이성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열린 해석을 보여 주기 때문일 것이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도덕적 판단의 필요성 내지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합리성(rationality)이다. 이때 이성이란 특정 유형의 자의식, 즉 우리 자신의 믿음과 행위의 근거에 관한 의식에 의해 우리가 가지는 힘, 능력이 다.³⁶⁾ 특정한 자의식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과 행위를 (규범적으로) 통제하고 이끄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이성능력은 자의식에 기초한 규범적인 자기지배(self-government) 능력과 같으며, 이런 자기지배의 능력은 인간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에 내재한 또 다른 속성, 즉 규범적인 자기구상(self-conception)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모든 선택-행위 및 그에 대한 통제 속에서 스스로를 행위의 저자(author)로서 구성해 내고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정체성)를 결정하며, 그렇게 형성된 실천적 정체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런 점에서 행위란 늘 자아구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코스가드는 인간행위-행위자-자아구성-정체성의 관점에서 칸트의 도덕성 및 실천이성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재해석하고자 한다.

그의 문제의식의 발단은, 행위는 본질적으로 단일체로서의 인간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인간 안에 작동하는 어떤 힘, 진리와 옳음에 관한 어떤 압도적인 능력으로서의 이성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이 입법하고 명령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자가 스스로를 의식하고 어떤 인간이 될지 선택하면서 구성적으로 도덕성에 다가간다. '내가 되고자 하는 나'로 되어 가면서 비로소 '내가 되어야 하는 나'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36) *Self-constitution*, Preface xi.

코스가드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다: 당신이 좋은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은 곧 ‘모든 합리적 존재자에 대해 보편법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과 합치되도록 당신 스스로를 구성하라’, 그리고 ‘모든 합리적 존재자에 대해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준호, “칸트적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학연구』, Vol.11,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7.
- 김정주, “이성의 사실과 도덕적 구성주의의 정당화—칸트와 롤즈의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연구,” 『칸트연구』, Vol.21, 한국칸트학회, 2008.
- 노영란, “행위와 행위자: Christine M. Korsgaard의 자아구성으로서의 행위설명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중심으로,” 『철학』, Vol.117, 한국철학회, 2013.
- 노영란, “롤즈 이후의 칸트적 구성주의: 구성주의의 딜레마와 존재론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06권, 한국윤리학회, 2016.
-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칸트연구』, Vol.20, 한국칸트학회, 2007.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Birnbacher, D., Hoerster, N.(Hg.), *Texte zur Ethik*, München, 1976.
- Frankena, W. K., *Analytische Ethik, Eine Einführung*, München, 1972.
-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Weischedel, W.(Hg.) Suhrkamp Taschenbüchern Wissenschaft in zwölf Bänden VII, 1982.
- Korsgaard, Ch., *The Constitution of Agency*, Oxford, 2008.
- Korsgaard, Ch., *Self-constitution: agency, identity, and integrity.*, Oxford, 2009.
- Krämer, H., *Integrative Ethik*, Frankfurt, 1995.
- Korsgaard, Ch.,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New York, 1996; 김양현 · 강현정 역, 『목적의 왕국』, 철학과 현실사, 2007.
- Korsgaard, Ch., *The Source of Normativity*, Cambridge, 1996; 강현정 · 김양현 역, 『규범성의 원천』, 철학과 현실사, 2011.

2. 논문

- Höffe, O., "Kants kategorischer Imperativ als Kriterium des Sittlichen," *Ethik und Politik*, Frankfurt, 1979.
- Korsgaard, Ch., "Self-constitution in the Ethics of Plato and Kant," *The Journal of Ethics* 3, 1999.
- Korsgaard, Ch., "Acting for a Reason," *Danish Yearbook of Philosophy* 40, 2005.
- McAninch, A. J., "Acting for a Reason and Following a Principle,"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ume 18, Issue 3, 2015.
- Rawls, J.,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Journal of Philosophy* 77, no.9, 1980.
- Seeman, B. N., 'The "Paradox of self-constitution" and Korsgaard's two Conceptions of Maxims for Action,' *Metaphilosophy*, Vol.47, No.2, 2016.
- Sylvie Delacroix(권경휘 역), "규범성에 관한 하트와 켈젠의 대조적인 개념," 『연세 법학』, 26권, 연세법학회, 2015.

Abstract

Kant's deontological Ethics and Korsgaard's neo-Kantian Constructivism

Lim, Mi-Won

Kant's practical philosophy counts as deontological ethics. It derives from the concepts of good will and obligation the categorical Imperative as a universal moral law. The categorical Imperative reflects the normative necessity of the human being, whose morality should be grounded in practical reason independent of the authority of God and the empiricity of man.

On a view of neo-Kantian constuctivism Korsgaard tries to defend the categorical Imperative as the principle of rational will. She introduces the concept of practical identity which is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rational agency. A person constituted as agency can stand at a reflective distance from the motives and be capable of acting for reasons. The normativity of rational agency is grounded on the self-constitution and the self-government. Her Analysis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Model of the soul.

Some argue that Korsgaard's conception of action fails to resolve the Regress problem and self-authenticating account. Notwithstanding, the appeal to the self-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action as the attempt to ground morality on rationality seems to convince us of the conformity of practical identity with normativity.

색인어

칸트(Kant), 의무론(deontology),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 코스가드(Korsgaard), 구성주의(constructivism), 자아구성(Self-constitution), 실천적 정체성(practical identity)